



행복한 신중년을 위한 사회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보도자료 2020. 7.)’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이고, 희망하는 근로 상한 연령 평균은 73세이다. 이는 내부 노동시장에서 외부 노동시장으로 밀려나, 안정된 1차 노동시장이 아니라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이라는 3중의 불안정에 노출된 2차 노동시장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생애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사회보장제도 미비에 원인을 두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우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잉여 세대, 잔여 세대로 전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역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정부에서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인생 3모작 지원 정책’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중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첫째, 신중년층의 인구 규모이다. 2020년 현재 50~69세의 신중년층은 1500만 명 선으로 총 인구의 29% 정도를 차지한다(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19.12.). 연간 평균으로는 75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 30만 명의 2.5배 수준이다. 2030년이 되면 더 불어나

1700만 명 선에 이르고 총인구의 약 3분의 1까지 그 비중이 커진다. 이후로는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0년대까지 30% 선을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30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신중년층이 총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중년이 이 사회의 짐이 되느냐 힘이 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나 사회의 성격,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둘째, 신중년층의 경제활동 참가 규모이다. 후기 신중년층으로, 유엔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노년인구로 분류하는 65~69세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이 49.5%(남자 61.8%)로 절반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OECD, 2020. <https://stats.oecd.org>).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일본과 동일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65~6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엔에서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는 청년층인 15~1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8.3%의 6배가 넘고, 20~2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48.7%보다 오히려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가 규모가 크고, 높은 대학 진학률이나 병역의무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 시기가 늦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엔에서 정한 생산가능인구의 연령 범위를 15~64세에서 20~69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어 계산하면, 생산가능인구에서 신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1%에서 2040년 49.0%, 2050년

54.1%로 크게 높아진다. 반면에 노인 부양비는 기존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에 비하여 2020년에는 21.7%에서 14.6%로, 2040년에는 60.1%에서 41.1%로, 2067년에는 102.4%에서 76.1%로 크게 낮아진다.

셋째, 신중년층 내부의 이질성이다. 신중년층은 그 규모가 큰 만큼 구성도 다양하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펴낸 연구보고서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황남희 외, 2019)에 따르면, 신중년층은 거주 지역이나 가구 유형, 교육 수준, 경력, 취업 상태, 소득 수준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신중년 집단 내부의 생활상이나 가치관도 매우 다르다. 신중년층이 처한 조건이나 필요, 욕구가 개인이나 집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중년층을 노년층, 청년층과 구분되는 단일한 연령층으로 보고 신중년 정책을 획일적으로 설계하거나 집행하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다 세대 내 형평성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특히 지난 30년 이상 더욱 굳어지고 더 격차가 커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로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 온 신중년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은 근로 기간 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짧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도 못한다.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나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들을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

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신중년층의 특수성이다. 처음에 밝혔듯이 신중년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사회보장제도의 결함 또는 미성숙으로 인해 생긴 독특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신중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특히 고용 정책이나 사회보장 정책을 펴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미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은 우리와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제도일지라도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58)는 그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핵심적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노동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필연적인 활동이고, 작업은 외부 세계에 자신을 남기기 위하여 하는 창의적인 노력이며, 행위는 다원적인 개체로서 집단 결정에 참가하는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결국 인간의 생활 영역은 노동자로서의 삶과 작업자, 즉 장인으로서의 삶과 행위자, 즉 시민으로서의 삶으로 나뉜다.

신중년을 개인의 생애주기로 보면, 이 시기는 다가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자기실현을 위한 인생의 결실기일 수도 있고, 공적인 장을 통해 새로운 사회, 다른 세상

을 꿈꾸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신중년층이 노동자로서, 장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느냐가 신중년 정책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중년층의 노동자로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장인으로서의 삶이나 시민으로서의 삶이 충실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통계청. (202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7.28.
-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 황남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annah Arendt.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SEXAGE_I_R#에서 2020. 8. 3. 인출.